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6
----------	-------

발의연월일 : 2018. 12. 27.

발 의 자 : 김태흠 · 김도읍 · 박덕흠
이은권 · 주호영 · 원유철
이명수 · 정우택 · 박맹우
성일종 · 박대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반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6조의2(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u> <u>2.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u> <u>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p><u>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p>
<p>제70조(과태료) ① (생 략)</p> <p><u><신 설></u></p>	<p>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u></p>

<u>②</u> (생 략)	<u>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